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과 통일방안 모색\*

김귀옥\*\*

분단 55년 동안 수많은 정치가들이나 학자, 재야 운동가들이 나름대로의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 방안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이나 목표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이나 정치적 지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적인 체제의 통일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사회·문화적인 통일 접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된 데에는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 작용하고 있다. 1990년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왔고 사회주의 동독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서독 체제의 성공의 결과로 비쳐졌다. 통일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동서독 주민들간에는 화합의 여지보다는 갈등 현상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사실 통일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한 많은 나라들 역시 제도적 통일 후, 오랫동안 사회·문화적 분열 현상을 겪었고 현재도 그런 나라들이 있다. 사회·문화적 갈등이 체제의 위기로 직접적으로 전화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줄일 수는 없을까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의 경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일단 남한에 수용하게 되면 현 정부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면서 남한 체제에 동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

\*이 글은 아직 시론적 수준이다. 문제의식과 장·절 간에는 비약도 많고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중언부언도 보인다. 많은 논평과 심화 연구를 통해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심화된 논평을 부탁한다.

\*\*경남대학교 북한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전공분야는 역사사회학, 북한사회론, 민족사회학, 성과 사회연구이다. 주요저서로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1999),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2000),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2000), “아래로부터의 반공이데올로기 허물기: 월남인 구술사를 중심으로”(1999),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1998) 등이 있다.(연락처: 019-228-1446, E-mail: freeox8@orgio.net)

이탈주민은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겪고 있다. 남북 정권이 흡수통일을 포기한 마당에, 북한주민을 동화시키려는 전제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적응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통일방안을 고려해야 하면 남북 주민이 같이 살기 위한 공동체,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1. 머리말

2000년 6월 15일의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최대의 희소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지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다.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가로놓인 장애물은 남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준하는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 통일 이상의 지상명령은 없다"라고 절대명제로서의 통일을 역설했다. 물론 사회조사에서나 피상적인 물음에서나 통일을 희망하느냐고 물으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그렇다'고 대답한다.<sup>1)</sup> 그런데 어떤 통일이냐는 대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고 왜 통일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중구난방이 된다. 이런 시기 장준하의 기상찬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맞이한 분단과 전쟁은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을 좌절시키고 한반도의 주권을 외세에 맡기게 하였다. 통일이 민족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게 된다면, 장준하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떤 통일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분단국들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모든 통일이 그러한 가능성을 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흡수통일<sup>2)</sup>은 응축된 사회모순을 한꺼번에 터뜨리게 하였다.<sup>3)</sup>

1) 통일에 가장 무관심한 층의 하나님인 청소년들도 6·15 이전과 이후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는 대단히 낮고, 텔레비전으로부터 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87.7%로 나타났다(김민곤, 2000).

2) 몇몇 논자들은 독일통일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장호(1997)는 그것을 전 동독의 회

기세 좋게 전개되었던 1990년대의 ‘흡수통일론’이 한 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물론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언명에서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sup>4)</sup>라고 하여 흡수통일의 날을 감추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 및 남북 관련한 수많은 국내외 학술 대회, 발표회, 심포지엄, 정치토론회 등에서는 흡수통일을 전제한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있었다. 국내적인 조건에서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높여주었던 것은 10배나 넘는 남북간의 경제 격차, 1994년 김 주석 서거 이후 북한의 식량 위기와 경제 악화, 그에 따르는 대량의 북한이탈 난민들이었다.

여기서 잠시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의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남한의 관계 당국과 대중매체들은 북한이탈난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흡수통일의 날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선전하였다. 중국 등을 떠도는 난민이 수 만, 수십 만명이 된다는 보도도 연일 매체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사실 5년간 북한을 실제 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그 수야 어찌되었건, 최근 좋은 벗들의 조사(좋은벗들, 2000)에 따르면 이탈난민의 71.7%는 귀향의사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식량난민’이지 반체제망명객이 아니다. 또한 통일부의 최근 자료, 「북한이탈주민 입국. 거주 현황」에 따르면 그들은 대개 최근 탈북자들이 아니라 일시적 또는 장기간 제3국에 있던 체류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은 줄어들고 있다’<sup>5)</sup>고 한다.

---

의 형식적 동의를 거친 서독으로의 ‘편입식 통일’이었다고 본다.

- 3) 독일 통일을 지켜본 홀거 하이데는 단기적 흡수통일에 의해 내부 식민지화를 겪고 있는 통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흡수통일이 갖고 올 필연적인 극단적 사회분열을 경고하고 있다. 홀거 하이데,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창작과 비평』, 1993년 봄. 그외도 많은 독일 지식인들은 흡수통일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기를 한반도 통일을 앞두고 충고하고 있다.

4) 김영삼 대통령 광복 49주년 기념식(1994. 8. 15) 경축사 중에서(이용필 외, 1995).

5) 통일부의 이 자료는 연합뉴스 10월 12일자에 소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1998년 이래로 2000년 10월 초 현재 북한이탈난민 입국자는 총 422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간 입국한 250명보다 많다. 또한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2001년 들어 매일 3명 꼴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문화일보》2001. 2. 27일자). 그러나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조건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주제로 생산된 많은 글들은 한편으로는 남한 대북 체제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착 실태 보고와 남한 사회 적응을 돋기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sup>6)</sup>으로 쓰여졌다. 각 글들은 입장이나 시각은 상이하지만 대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체제에 '완전 동화' 할 수 있을 가능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북한주민에 대한 예비 연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완전 흡수통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주민들을 남한 체제로의 동화시킨다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깔고 사전 정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과연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람 만들기에 성공했는가?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는 '북한 김정일 체제에 반대하여' 이탈한 사람들이 남한 체제로 동화시키는데 성공했는가? 과연 이러한 정책이 토대로 하고 있는 흡수통일 방안은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할 해법인가? 우리는 어떤 통일 과정을 쫓을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북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남북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 먼저 북한이탈주민 남한 사람 만들기의 실상과 함의를 간략히 짚어보고 남과 북 주민이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탐색하고, 나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원칙을 밝히기로 한다.

6) 전우택·민성길,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1996);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 심포지움』(1997);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책지원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 분석』 제119호(1996); 이상만, "북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후 북한주민들의 체제적응 방향" (1997);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김동배·이기영, 1997. "민간기관의 탈북자 지원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등 다수.

시기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시기	1949~1981*	1981~1992*	1993~1997**	1998~2000.9***	총계
수(명)	418	81	242	422	1,163

이 표는 \*이종훈(1996: 7) \*\*김귀옥(2000: 3~16)<sup>7)</sup>

\*\*\*통일부(2000) 세 개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c.f. 1980년대 이전에 탈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파공작원이나 군인 중 전향한 사람들이어서 현재적 의미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 2. 남한 사람 만들기의 교훈과 함의

### 1) 남한 사람 만들기 과정

1949년 아래로 2000년 10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위에서 보듯이 약 1,100명이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의 수는 절반이 넘는 664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용어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sup>8)</sup>이다. 그들의 적응 성공(또는 성공 예측) 여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소수의 견해로 대별되어 있다.<sup>9)</sup>

이 글에서는 남한에서 과연 북한이탈주민을 입국시킨 후 얼마나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 적응했으며 남한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

7) 김귀옥의 자료는 국정원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로 하고 있다.

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1996년 제정)의 제2조 1항의 정의에 따른다.

9) 예를 들면 전우택 · 민성길(1996) 등 많은 글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있으나 그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종철 · 김영윤 · 이우영(1996)은 체제에는 잘 적응하고 있으나 생활 적응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혜정(1995)은 남북의 상이한 체제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어려움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선한승(1995) 역시 적응의 어려움, 특히 짧은 충일수록 어렵다고 지적했다. 접근자의 적응의 지표에 따라 적응 성공(가능성) 여부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우선 입국 과정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일을 보자.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에 입국하는 일은 비교적 쉬웠다. 그 숫자가 적다는 이유와 북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라 이탈자는 대개 여러 가지 이유로 반체제적이라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특히 1995년 식량난 이후 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탈북 동기가 불투명한 사람들이나, 탈북 이후 제3국 체제 기간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보기관에서는 그들을 선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중국이나 소련과의 수교 이후,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입국시키기에는 ‘황장엽’처럼 비중이 높은 인물이 아닐 않을 경우 제3국이나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 이후에는 이탈주민들이 남한행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선 남한행을 하려면 자신이 ‘위장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심문을 받기 전에라도 이탈주민들은 대개 기를 쓰고 남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시청취하면서 남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 남한 말씨를 배운달지 남한 방송에서 북한의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는가를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남한행 티켓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입국한 후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1999년 1월 17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 회원들이 밝힌 바처럼 그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먼저 대성공사에서 일정한 기간 체류하면서 안기부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기무사, 경찰청 등 각종 대공기관의 합동 및 개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조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인권적인 상황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성공사에서의 짧으면 몇 달, 길면 1여년의 체류기간은 정보기관 측에서 보면 그들을 남한 사람으로 만드는 초기사회화의 시간이 된다. 글쓴이가 심층면접한 북한이탈주민 중 몇 명의 증언을 보자.

한 증언에 따르면 대성공사를 “그게 감옥이지. 어디. 들어가 봤어요? 창문이, 밖에 내다보면 철판이 이만한 넓은 철판으로, 철판으로 이렇게 사창 다 해놨어요. 요렇게 내다보면 암만 봐야 요거밖에 안 보여요. (손바닥으로 표시) 그 안에 화장실도 다 있지”라고 한다. 또한 다른 증언자도 “처음에. 신문을 가져오는데 문 밑으로 탁 던지는거야. 한 번은 내가 그 걸로 인해서 그 (대성공사의 담당)선생한테 항의했지. 어떻게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으면 그렇게 던지는가 그랬더니 그것이 보통이래” 라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보냈던 초기 남한 시절을 회상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할 일이 TV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했다(김귀옥, 2000: 3-76).

대성공사에서 그들은 남한 사회나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가를 배우는 초기사회화를 거친 후 남한 사회인들과 섞여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관할 경찰서의 보호를 받아, 대외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측(또는 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대상자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실업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남한 사회에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직업 훈련과 보호 관리 기간, 사회적응 교육, 경력 인정 및 특별 임용 등을 명시했다. 1999년 7월 8일에 설립된 통일부 산하 ‘하나원’은 대성공사 거치 기간을 마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략 3개월 정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2명 중 미취업자(학생과 전업주부 포함)는 북에서 14.8%이지만 남에서는 59.8%로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업을 가진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들어보자.

난 (대성공사에서) 나와서 딱 2달 놀고 이때까지 일하고 있거든. 산에 오른다든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나는) 여태까지 일 시작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안 하고픈 생각만 난다고(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위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상당수는 직업이 없거나 사실상의 실업 상태에 있다. 구조적 적응부터 문제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적응 상태를 진단해보기로 한다. 1999년 한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인턴으로 고용한 바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이탈하기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그는 1993년에 남한에 들어와 군의 대북방송팀 아나운서, 북한문제 강연자로 활동한 바 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아 그는 남한 사회에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시민단체에서 한 달도 못 버티고 울면서 그만두었다.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업무가 복잡하여 그랬던 것도 아니다. 단지 그는 남한 사회 문화에 적응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허다한 외래어 사용, 복잡한 기계(컴퓨터, 팩스, 복잡한 전화선 운용) 작동 등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표면적인 이유였다. 자신의 자녀는 남한 사회에 성공하도록 북한의 모든 것을 잊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마치 미국 초기 이민자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이나 한국적인 것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미국화하기를 열렬히 갈망했던 것과 비슷하다.<sup>10)</sup>

그렇다면 그들은 남한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했으며, 남한 사회 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여기는가를 살펴보자. 2000년 7월, 글쓴이의 심층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 15명의 대부분은 ‘자신은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첫째, ‘남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식하다고 차별’ 받을 때, 둘째, 남한 음악이나 대중 문화를 접하면서 여전히 북한 문화에 더 친숙함을 느낄 때, 셋째, 심정적으로 느낄 때라고 한다(김귀옥, 2000).<sup>11)</sup>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가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김귀옥, 2000; 김명세, 1999). 김명세는 남한 사회가 북한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김명세, 1999).

그들이 남한 사회의 적응, 또는 동화에 성공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물론 그들의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설부른 감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지, 또한 북한 사람을 우리의 방식(?)대로 남한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지,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2) 남한 사람 만들기의 반성과 함의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체제내화시키는 방식이나 중국 조선족을 대응하는 방식, 또는 해외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첫째, 남한 정

10) 이러한 양상에 제동을 건 것은 1992년 4.29 ‘한·흑 갈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미한인동포들에게 자신들도 결국 소수민족이라는 제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각성을 줌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정체성을 찾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윤인진, 1996).

11) 심지어 북송교포 몇 명의 경우, 자신은 남한 사람도 아니지만 북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여 무국적 정체성, 또는 코스모폴리탄적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김귀옥, 2000).

부나 관련 기관들의 ‘자기중심적’ 인 태도, 즉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외국인공포심(Xenophobia) 등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 사회에 정착 및 동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원의 설립 당일 통일부 차관의 치사에서 밝혀졌듯이 하나원은 단지 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정착 및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만이 아니다. 즉 그는 “하나원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점”과 “하나원은 남과 북이 한가족으로 서로 다가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sup>12)</sup>을 분명히 하였다. 하나원은 과거의 대성공사와는 달리 사회 적응교육이 강조되고 있어서 일정한 수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야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과 더불어 같이 사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문제로 환치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훗날 남북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문제를 별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남한 사람 만들기에 성공적이지 않은 것은 남한 주민들이 북한 사람과 관계 맺기의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글쓴이가 수행한 전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에서 “만일 통일 후 북한주민이 귀하의 이웃에 살게 되는 것을 귀하는 환영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에 달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1999: 39-40). 또한 1999년 KBS의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북한 사람과 악수정도 하는 ‘가벼운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단짝 친구’ 나 ‘인척’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BS 통일방송연구, 1999: 60-61). 다시 말해 통일에 관심이 있고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대개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을 가까이 사귀고 같이 산다는 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유보적이다. 이러한 반응은 90년대 북한 사람들을 ‘거지떼’로 만들어 온 언론 때문만은 아니다.<sup>13)</sup> 50년의 반공교육이 빚어낸 ‘적색 공포증(red

12) 연합뉴스 1999년 7월 8일.

complex)'의 결과이다. 그런 태도에는 '나'가 아닌 '타자'<sup>14)</sup>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면화되어 있다(권혁범, 2000가).

셋째, 통일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원칙적이며 구체적인 고민 없는 통일 방안만이 무성했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배경이다. 1990년대만 보아도 남쪽에서는 흡수통일이라는 대원칙하에 '(한)민족공동체안'의 우월성이나 그 방안의 골격을 갖추는 논의는 무성하였다.<sup>15)</sup> 그러나 어떻게 서로 공존할 것인가,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사실은 충분한 모색을 하지 못했다. 또한 통일이 안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렸다. 북도 그렇지만 남도 북의 통일방안을 '적화통일' 방안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운위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예봉을 들이댔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나올 리 만무했다. 또한 통일은 상대에게 주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놓쳐버렸다. 다시 말해 통일의 문제를 체계 수준에서 이해하고 생활세계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통일의 내포에 대한 재규정 문제로 나아간다. 과거 '통일'이라는 말은 체계 수준의 제도적 통일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과거 채야 통일 운동에서는 앞에서 장준하식의 '통일/반통일'이라는 대립구도속에서 정권과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성찰적으로 보건대 '북한바로알기운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통일을 만들고 준비하는 노력을 부족하였다. 통일이 '더불어 같이 살기'의 과정이라면,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세계 수준에서 일상인에게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남한 사회내에서만 해도 더불어 같이 살기라는 공동체 정신이 부재된 지 오래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의미를 제도적 수준뿐만 아니라 생활세계 수준에서 같이 사는

13)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우에도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복수응답)에 북한 정보 접근의 체널은 텔레비전(87.7%), 신문 라디오(48.1%)이며 학교 교육은 24.7%에 불과하다고 한다(김민곤, 2000). 그런데 그 동안 한국 언론은 북한에 대한 고정 관념적 공격과 매도로 일관해 왔다(리영희, 1999). 그런 조건에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암목을 갖기란 거의 힘들다.

14) 타자란 넓게는 '나' 이외의 모든 존재(others)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여성이나 빈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고병현, 2000).

15) 대표적인 책이 민족통일연구원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1994)이다.

문제, 즉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드는 의미로 지형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 3. 통일 방안

이상에서 간단히 짚어보듯이 남북 주민이 같이 살기 위한 실험단계<sup>16)</sup>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의 공존은 별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럴진대 실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가? 남북 주민이 같이 사는 상태를 느슨하게 ‘사회문화공동체’로 명명했을 때, 그러한 사회문화공동체가 성립될 수 있는 큰 틀로서 통일방안을 먼저 짚어보아야 하겠다.

#### 1)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만남의 가능성

이 논의의 중심을 지난 6월 15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2조에서부터 풀어보려고 한다. 즉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남한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시비가 있다. 야당측 지도자들<sup>17)</sup>이나 수구보수세력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적화통일’이라고 하여 남북공동선언을 뒤엎으려는 여론을 형성하는 중이다.<sup>18)</sup> 그렇다면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16) 그러나 반성컨대, 정부나 관변측의 이러한 발상은 무책임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생사여탈의 문제 가 통일 준비를 위한 실험이라고 한다면, 이탈주민들은 실험대상물인가?

17) 지난 10월 11일 이희창 한나라당총재의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던 연방제 논의는 자유민주체제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연합뉴스 10월 11일자)이라는 말은 수구세력들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말이다.

18)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그 원칙에 따라 국내외에 신뢰분위기가 모색되어가고 최근에는 ‘통일교육지원법’도 마련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광범위하게 실행될 예정이다. 실로 폭넓은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즈음에도 민주산악회와 자유수호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노린 김정일의 사기극”, “김정일 방한 결사 저지”,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등과 같은 주장(《중앙일보》 2000. 11. 1일자 하단 광

2조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은 현 김대중 정부가 순진하여 북의 정략에 휘말린 어리석은 일이거나 아무런 국민적 공감 없이 이루어진 일인가? 그간 이 둘의 차이점 만이 부각되어 두 통일방안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한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양영식,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외에 발표된 안 중에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을 결합시켜 발전시킨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 예를 들면 김낙중의 '3차 7개년 4단계 방안' (김낙중·노중선 엮음, 1989)이나 김대중의 '3원칙 3단계 통일안' (김대중, 1995)은 모두 완전한 1민족, 1국가, 1체제를 형성하기까지 연합단계와 연방단계를 상정해 놓고 있다. 또한 문익환의 '3단계 연방제방안'은 국가연합단계와 연방국가 단계를 거쳐 분권연방국가로서 '1국가 다체제' 방안(문익환전집출간위원회, 1999)을 설정하였다.<sup>19)</sup>

이미 학계에서도 몇몇 글을 통하여 연합안과 연방안의 접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임혁백(1995)과 강정구(1993)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다.

임혁백은 계임이론에 입각하여,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특징을 밝혔다. 연방주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단이 남북 당국에게 안정적 균형상태를 제공해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쌍방에게 공동선(public goods)임을 수용하여 남북은 제3자인 '연방'의 초국가적 권위체에 권력을 위임한다고 가정했다. 연방주의의 핵심은 연방적 문제에 관한 한 지역 자치권을 포기하는 정치적 협약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기능주의의 경우, 다방면의 거래, 교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속에서 한 부문에서의 기능적 통합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spill-over)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행위자들에게 통일의 이점을 알려 자발적으로 통일을 택하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전자는 정치적 해결을 중시하여 통일 목표를 명시하고 폭력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자원의 배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자(free-rider)를 제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단 당국이 과연 자발적으로 폭력수단을 연방에 위임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연방'이라는 초국가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다. 반면 기능주의는 과정과

고)을 하는 분단고착세력들의 언설은 실로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 이미 70년대 천관우는 연방제 성격을 가진 '복합국가론'을 피력한 바 있다(강정구, 2000).

절차에 충실하고 상호거래(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통한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통일을 보장하는가, 교류를 통한 이득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통일은 공공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류(spill-back)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임혁백, 1995).

여기서 임혁백은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의 모델은 남북의 적대적 분단체제하에서 사회의 분열구조(cleavage structure)가 고착화된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권력분점을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대결을 피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안은 네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① 대연합(grand coalition) 정부<sup>20)</sup> 구성 ② 상호비토(mutual veto) ③ 비례대표성(proportionality in representation) ④ 부분적 자율성(segmental autonomy). 협의주의는 통일로 가는 과도적 방법이며 분권적인 국가연합에서 중앙집권적인 연방으로 가는 지향을 갖고 있다.

강정구(1993) 역시 임혁백의 협의주의 방식에 동의를 보내고 있다. 그는 남북이 처해있는 현실적 조건에 기반을 두고 두 접근법이 접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고 있다.

두 접근방식의 접합에 대한 전략 구상은 단순한 산술평균적 결합이 아니라 현재 남북의 역학관계를 주어진 조건(given conditions)으로 두고 이 바탕 위에 공동체 구성요소인 동질적 가치관의 공유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담보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곧, 남과 북의 역학관계가 균등할 경우에도 기능주의적 접근은 강자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현재 남북의 역학관계가 심한 불균형을(GNP수준에서의 10배, 인구수준에서의 2배, 년군사비 수준에서의 1970년대 중반 이후 3~4배, 남한의 외교망 확장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화 등)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보조적으로 접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강정구, 1993).

---

20) 대연합 정부는 '다수결의 독재'를 불식하여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 어떤 한 집단도 다른 집단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집단이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이다(임혁백, 1995: 85).

그는 큰 틀에서 연방주의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구체적 과정에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보조적으로 접합하여 남북이 공존 가능한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두 연구물의 결론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장·단점에서 통일 상황이 비가역적이 되도록 하려면 큰 틀에서 연방주의적 방식을 모색하되, 공동체 구성요원들이 동질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방식을 결합시키는 방안에 도달하고 있다.

## 2) 만남의 실현가능성과 과제

위의 연구 결과물의 발상처럼 기존의 통일 방안 논의나 공식 통일 방안에서도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의 접합 가능성은 탐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그 접합의 잠재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sup>21)</sup> 또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의에서 예상 밖의 성과도 그간의 탐색전이 공동선언을 낳는데 산파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접합의 가능성이 남북의 통일 방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각 방안의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의 과도 단계에 해당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우리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합니다(노중선, 1996).

21)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장희의 글(1997)을 참조바람.

위의 인용문은 1991년 1월 신년사에서 북의 김일성주석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면서 나온 ‘느슨한 연방제’ 안이며 이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불리게 된다. 그것은 과거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비하면 일정한 과도적 단계를 설정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외교권을 지역정부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남한의 통일 방안을 살펴본다. 김대중의 ‘3원칙 3단계 통일방안’<sup>22)</sup>은 공화국연합 → 연방제 → 완전통일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 ‘공화국연합(국가연합)’에서는 남북 양 공화국은 외교, 국방, 내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대표를 파견해 공화국 연합기구를 구성하여 평화 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실현해 2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준비를 하도록 설정하고 있다.<sup>23)</sup>

두 방안의 첫째 단계는 모두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리, 특히 군사, 외교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자의 공화국 연합기구가 전자의 연방기구와 타협할 수 있다면 두 방안에는 타협점이 존재한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통일방안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통성을 수용하였다. 자주적 원칙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각각의 통일방안은 상호 신뢰의 문제 외에도, 기능주의적 접근이냐 연방주의적 접근이냐는 근본적인 차이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합의체(또는 협의체)로서의 느슨한 연방 정부를 만들어 내고 기능주의적인 교류와 상호의사소통을 확대하는 방식을 밟아나간다면 민족의 합의에 따른 통일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듯 하다.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신뢰를 해쳤던 흡수통일의 욕구를 잡재웠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논의하고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했던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제 과제는 남북의 협력과 교류 과정에서 어떻게 남북이 더불어 같이 살 수

22) 현 정부는 특별한 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태재단 이사장 시절 마련한 이 통일방안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23) 이 안에는 임혁백의 협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길로 가느냐에 있다. 어떻게 남북의 통일 사회문화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 4.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길

##### 1) 갈등과 조화의 산물: 통일 사회문화공동체

남북 통일은 미완의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이자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이기도 하다. 하버마스(J. Habermas)의 개념을 빌려, 광의의 사회를 체제인 동시에 생활세계로 파악<sup>24)</sup>하려고 할 때, 통일은 체제의 통일과 생활세계의 통일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체제의 통일과 생활세계의 통일은 상보적일 뿐만 아니라 대립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체제와 생활세계는 서로에 의지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보적이게 된다. 그러나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인들은 생활세계와 그 주민들을 지배 및 통치하는 가운데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갈등 및 대립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는 생활세계 자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주민들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기 십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물질적 욕구조차도 '상품화의 영역'에 국한시킨다. 체제에 지배를 받기 마련인 생활세계라 하여 항상 체계에 포섭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세계 주민들은 생활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침투하며 필요와 조건에 따라 생활세계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 극단적인 형태는 사회 혁명이나 농민 봉기 등이다.<sup>25)</sup>

24) 하버마스는 현상학자 훗설로부터 생활세계 개념을 도출해 낸다. 그는 체계 기능론자인 파슨스의 체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여 모든 사회가 관료제, 과두 독재의 덫에 갇히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가능성을 의사소통에서 찾고 있다(Walter Reese-Schäfer, 1998[1991]).

25) 맑스나 베버는 상이한 입장에서 각각 민중의 가치를 간취한 것으로 보인다. 맑스는 생산관계에서의 모순에 의해 민중들이 계급의식을 획득함으로써 체제를 바꾸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마페졸리의 식대로 말하면 베버는 민중들은 '살아온 삶의 자연스런 결과'로서의 '공통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M. Maffesoli, 1994: 48).

또한 생활세계 자체도 갈등과 조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집합이다. 계급, 직업·직위, 세대,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욕구, 관습, 습관, 감정, 인식체계 등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생활세계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생활세계에서 구성원들이 도구와 가치,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화의 실천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도구나 가치, 규범, 생활양식, 의미화의 실천 등을 문화라고 할 때(Warnier, 2000; Swidler, 1986; Williams, 1983), 결국 사회와 문화는 생활세계에서 동시에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게 된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실천 자체가 문화 행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문화를 별개시하지 않고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과는 일정한 구분되는, 정치·경제·군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강정구(1993)의 개념을 빌려온다.<sup>26)</sup> 또한 사회문화공동체를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동일시하기로 한다.

한편 고전 사회과학에서 ‘공동체(community)’라는 말은 이질성이 강한 ‘도시’, ‘사회’와 뚜렷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써스만(Sussman)의 공동체는 “개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집단적 목표를 획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한된 지리적 영역을 범위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신용하 엮음, 1987: 64). 그러나 현대 사회과학에서 공동체는 구체적인 지역 개념을 갖고 사용하기보다는 일정한 특성을 갖춘 사람의 추상적인 집합체를 일컫는 경향이 있다. 이 공동체는 대중매체와 같은 의사소통수단의 의해 동질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동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구의 민족국가(nation state)로서 ‘공동체’는 다분히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처럼, 강력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 통일 전쟁을 겪고 대중교육이나 인쇄술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의 확산과정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동구, 구 소련의 민족국가에서는 ‘게르만족’ 또는 ‘슬라브족’이라는 종족적 기원이 통일 민족국가를 실현시키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향후 우리

26) 이러한 정의는 윤덕희·김도태(1992)의 ‘사회문화공동체’ 개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가 지향할 사회문화공동체는 앤더슨의 다민족을 상정한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 보다는 스미스(A. Smith, 1996[1986])의 종족적 기원(ethnic origin)을 가진 민족 공동체 개념을 토대로 하여 논의를 출발하려고 한다.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한 여러 통일 국가들의 모습에서 사회문화공동체를 바라보는 교훈을 도출하기로 하자. 우선 대다수의 나라에서 체제의 통일과 생활세계의 통일에 불일치와 지체(time-lag)를 경험하였다. 과거 유럽의 근대 민족 국가 수립과정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 소수민족들(ethnies)을 아우르는 체제의 통일은 이루 했지만, 생활세계에서는 술한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다. 영국은 일찍이 ‘앵글로 색슨’(Anglo-Saxon)이라는 단일 민족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아일랜드는 식민지에서 이탈하기에 이르렀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도 여전히 소수 민족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김귀옥, 1998). 특히 독일은 1990년 제도로서의 통일은 이루었지만, 과거 동·서독인들간의 차별과 편견이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음을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의 근대 국가 형성은 변방의 개척<sup>27)</sup>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년 가까운 역사가 흘렀지만, 미국에는 소수민족과 계급을 가르는 분단선이 여전히 존재하여 체제 통합 수준은 높지만 생활세계 수준에서 보면 소수민족간, 계급간, 집단간에는 분열이 존재한다(Zinn, 1990; Bonacich, 1973). 즉 많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활세계 안에 내부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다(장 춘의 외, 1996). 대부분의 사회에서 하나의 체제로의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생활세계는 완벽하게 통일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은 형성 과정에 있는 유럽공동체(EU) 회원국들의 체제는 다양하고 갈등적 요소들이 많지만 크게 보아 인적, 물적 교류와 상호의사소통 구조를 창출해 내어 느슨한 하나의 사회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또한 통일된 나라들의 경험을 볼 때 조건들이 다양하고 통일 후 체제의 성격도 다양하다. 독일은 자본주의 모델로 통합이 이루어진 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도이모이 총리가 주도하는 개혁·개방에 의해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골간은 유지하되 자본주의 국가나 기업들과의 왕성한 교류에 의해 시장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다민족 국가인

27) 미국 지배자들은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점령을 ‘변방 개척’이라고 명명하였다(H. Zinn, 1990).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의 신탁통치를 겪은 후 국민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 정부를 수립하였다(리영희, 1997). 혼합적인 체제로 운영되는 중앙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관계도 비교적 평화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장희, 2000).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신탁통치의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사실 2차 세계 대전의 결과, 강대국들의 신탁통치(분할 관리체제)나 전후문제 처리과정에서 인위적인 분단을 겪은 나라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최소한 20개국이 넘는다(리영희, 1997).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만이 분단된 채 남아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여전히 전운이 감돌기는 하지만 경제적 교류나 사회적 접촉은 활발하고 이산가족들의 교류도 이미 한반도와 비교하면 자유로운 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 볼 때 체제의 통일은 힘의 논리나 이성적 논리,<sup>28)</sup> 지배의 논리로 점진적으로도, 급진적으로도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의 통일은 체제의 통일과 병행하여 일어나되 대개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벽히 일치되는 동질성이 통일의 조건만은 아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한 영어를 영국인 전체가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을 장구하다. 유럽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대중교육을 광범위하게 받게 된 20세기 이전에는 여전히 자신의 소수민족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통일된 국가 내에서 술한 갈등과 대립이 있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분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통일되는 길에서 갈등 없는 과정을 상정하거나 완전히 동질적이 되어야 통일할 수 있는 주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강정구, 1993; 차재호, 1993). 또한 1997년 7월 1일, 자본주의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에 반환되었다. 설령 체제가 다르고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통일이 분단보다 더 이익이 된다면,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많다면, 통일을 이룩하려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의 힘은 당위만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불완전한 근대 국가는 언제든지 갈등과 충돌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에 의해 자주권의 도전을 받기 십상이다. 또한 분단 유지비용의 항상적

28) 근대 계몽주의자들의 국가관인 '공동선'으로서의 국가는 각축하는 다양한 세력들간의 대립을 피하려는 이성적 합의의 산물이다.

인 지출이 요구되므로 분단 국가의 국민들은 불안정한 생활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분단으로 갈려진 이산가족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교류에서도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또한 분단 유지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은 중요한 시간을 국가의 강제에 의해 군복무의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고 군비 유지 및 확장 비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비용이 허비되고 있다. 삶의 질 자체가 분단에 의해 질곡 당하고 있다. 분단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기본권을 제약해왔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문화는 국가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금기시 또는 제약 당해 왔다. 따라서 분단은 자주적이고 평등한 삶,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를 억압해옴으로써, 독재정권하에서도 그러한 불균등을 타파하려는 통일 운동이 부단히 존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의 통일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은 그저 체제 수준의 움직임만도, 당위의 정명만도 아닌 생활세계 구성원들의 자연스런 요구이다. 결국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의 통일 문제는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남북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특징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 2) 남북 사회문화의 특징 비교

50여 년간의 분단은 모든 부문에서의 차이를 배태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차이 속에서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의 주 특징을 먼저 짚어 보기로 한다.

남한의 모든 삶의 기초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비롯된다. 여전히 전근대적 질서는 일상 생활의 규율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인간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는 공/사의 영역을 분리하고 노동과 여가를 분리하며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해체시켜 왔다. 개인들간의 불신의 기초는 오히려 연고주의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고주의는 목적합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낡은 잔재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연대망이 붕괴된 한국사회에서 같은 조건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이왕이면 신뢰할 수 있고 권위적 체계가 수용될 수 있는 연고주의에 기초한 선택은 개인주의의 원리 속에서도 합리적 친화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이재혁, 1998).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개인

주의와 연고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북한의 체계와 일상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집단주의이다. 흔히 북한을 이해할 때 집단주의를 당이나 국가가 주입한 공식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sup>29)</sup> 개인주의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나 체제의 산물이며 생활전반을 지배하듯이 집단주의 역시 그러하다.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소유부문이 국, 공유이며 경제가 계획이라는 고도의 정치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 모든 공장이나 농장, 기타 사업장도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 소비도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해왔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공장 설비들을 대단히 아끼고 소중히 취급한다.<sup>30)</sup>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국가안전기획부 1995)적 교육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립경제하에서 자신이 다루는 기계가 망가지면 자신의 생산량에 감소가 오고 공장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도급제로 받는 임금이 줄어 개인의 이익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결합은 관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산물만이 아니라 물적 토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sup>31)</sup>

그 외에도 북한 사회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항일무투식 생활문화’,<sup>32)</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현지지도’ 문화, ‘군-민일치’ 주의 등등. 또한 그들은 노동과 여가, 공사 영역이 분리되기보다는 합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그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속에서 집단주의가 작동하고 있어서 개인

29)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논의를 내집단과의 관계, 인간 관계성의 내용 등 사회 생활 전반에 걸친 항목으로 이해하는 트리안디스(Triandis, 1995)의 설명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개인이 내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이유에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객관적 조건에 대한 설명은 취약한 편이다.

30)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공식 문건에서 강조되지만, 실제 위탁가공업으로 방북한 남한의 실무자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바에서도 일치되고 있다.

31) 이 문제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으로 잠재 의식에서나마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에 익숙해 있고 남한주민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개인의 기주의’라고 죄악시하며 거부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작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남한의 현실 속에서 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가는 것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다”(김명세, 1999).

32) 이는 철저한 절약정신으로 표현되어 절약하여 생활 및 생산하는 각종의 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33) 자세한 것은 김귀옥(2000가)을 참조 바람.

의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이기)주의란 사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를 살펴보자. 공통된 남북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남성우월주의, 또는 선남사상은 권위주의와 함께 남북 사회를 가로지르는 특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의 가부장제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남한에는 가부장제를 뒤받침하는 제도로서 호적제가 잔존하고 있는 한편, 북한에는 호적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둘째, 가부장제 문화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가부장제 성문화가 남한에는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성상품화 문제는 인간관계의 물인격화를 부추기고 있다. 반면 북한에는 성 추행이나 폭행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나 성의 상품화를 거부함으로써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국한되거나 희롱이나 모욕의 대상이 되는 일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이승희, 1998; 김귀옥, 2000 나). 인격을 바탕으로 신뢰, 책임감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미혼모 문제나 중혼문제 등은 있지만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의 공통성의 하나인 전통문화의 수용은 남북 주민으로 하여금 ‘하나됨’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로 된다. 남북 주민이 같이 전통가락에 맞춰 춤추고 아리랑을 부르며, 씨름을 함께 즐기고 김치, 된장을 즐겨 먹을 때 우리는 동족정체성을 쉽게 떠올린다. 남한에서는 전통문화를 유지 보존하려는 정책이 경제의 발전에 따라 폭넓게 전개되어왔다(백완기·신유근 외, 1996). 그러나 문화란 생활양식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미 서구화된 남한 사회에서는 전통문화란 소수의 문화,<sup>34)</sup> 저항의 문화로 남아 있을 뿐이다.<sup>35)</sup>

그에 반해 북한에서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김정일, 1992). 즉 북조선의 사회주의 문화는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에 맞는 주체적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박승덕, 1989: 37). 그런 원칙에 따라 전통문화<sup>36)</sup>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34) 전통문화는 학교나 정부측에 의해 보호·장려(?)되어온 서양문화에 대한 대립태제로서의 ‘전통문화’와 대학생들이나 재야측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태제로서 ‘민중문화’로 이원화되어 존재하고 있다(원용진, 1996).

35) 북한이탈주민이 보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서구화에 저항하여 우리 것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극히 미약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김명세, 1999).

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고 노동자와 같은 대중이 사용하기 쉽게 수정시켜 왔다.

민족 동질성에서 가장 오랜 전통문화이자 사회문화 통합의 기본이 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언어이다. 우리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래로 공식적 문법 체계하에 전 국민이 한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분단 후 남북은 아직까지 한번도 공동의 문법 체계를 만들어 사용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자체계와 유사한 문법 체계를 갖고 있음으로 언어에 있어서 부분적 차이는 크지만 언어 자체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눈에 띠지 않는 노력도 차이를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우리 인민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이 통일되기 전에 글자를 고쳐써서는 안됩니다”<sup>37)</sup>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의 언어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는 크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언어’의 원칙 하에 한자말과 외래어를 다듬는 일을 하였다(박수영, 1985). 반면 남한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언어를 계속 다듬어 왔으나 전반적으로는 영어와 일어 등의 외래어를 거의 한국화시키지 못한 채 경제와 학문의 종속화와 함께 언어의 종속화도 심화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3) 통일된 사회문화공동체 만들기

최근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남북 교류로 우리는 남북의 공통성(동질성)과 차이(이질성)를 계속 확인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앞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된 많은 사회에도 차이 또는 갈등도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질성은 통일의 기초이며 차이(이질성)는 통일의 조건이다. 동질성과 차이의 변증법적 지향은 통일의 미래상이다. 동질성과 차이가 녹아있는 삶의 공동체를 통일 사회문화공동체로 명명한다.

이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 제도 수준의 통일과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병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통일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36) 북에서는 주로 ‘민속문화’로 부른다.

37) 김일성의 1964년 1월과 66년 5월의 두 차례 교시 중(전수태 · 최호철, 1989).

데에는 어렵고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정치 제도 수준의 통일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만 있으면 국민적 동의를 받아 만드는데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연방제를 기조로 하는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높은 단계의 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적 수준의 통일이 가능하려면 '자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 나라들간의 상호의존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1997년 IMF신탁관리체제에서 확인했듯이 종속경제를 가진 나라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통일이 세계자본에 맡겨진다면 결코 그 통일은 민족 성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경제 공동체는 일정한 정도의 경제 자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군사, 외교 주권상의 자주도 절박하다. 한반도는 40년 넘게 핵 위기를 안고 있고 1990년대 들어 심화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주권을 형성하는 일이 절박하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이 전에 교류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려면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을 유지, 재생산해 온 제도들<sup>38)</sup>의 철거가 시급하다.

그러한 바탕에서 생활세계 수준에서는 활발한 교류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 및 접촉의 문호를 최대한 개방하고 다각화해야 한다.<sup>39)</sup> 초기에는 경제부문의 교류나 큰 규모의 단체들의 교류가 우선시되겠지만, 점차 시민사회에게 문호가 열려 성별간, 세대간, 집단간, 지역간 접촉과 교류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일에 의해 만들어질 느슨한 통일정부, 또는 통일합의체는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조정자, 기회 비용의 배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동질성과 차이의 변증법적 지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질성이 통일의 기초라면, 차이는 통일의 조건이다. 이 둘을 어떻게 지양해낼 것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1980년대 후반, 통일운동과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민족 동질성의 가치에 강조점을 두었다. 같은 한반도를 영토로 하여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혈연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동질성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였다. 사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바탕에는 '분단고착화세력'에 대한 도전의식이 깔려 있었다.

38) 당장 개폐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법들로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비롯,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국가정보원법 등을 들 수 있다.

39) 보다 구체적인 남북 생활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김귀옥의 글(1999)을 참조바람.

그 운동은 당시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제한점도 분명하다. 다시 말해 문화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 경제, 사회의 성격은 문화의 성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1990년대 중, 후반, 동질성을 강조하는 통일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통일논의가 불어져 나왔다. 이우영(2000)의 '제도적 통일, 사회적 통합, 문화적 공존'이라는 명제나, 차이의 공존을 주장하는 발상<sup>40)</sup>은 대중적 공명을 획득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발상에는 학문적 지형의 변화가 깔려 있다. 즉 포스트 모던적 학문 풍조는 동질성 회복을 일종의 파시즘으로 간주하고 중앙에 의해 타자화된 수많은 주변부 사람들(minorities as others) 간의 차이의 정치, 차이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권혁범, 2000). 이러한 사상적 기조에 영향을 받아 전 시기에 비해 오히려 동질성을 배격하는 분위기마저 있다. 특히 남북의 '가부장제 문화'와 같은 유교문화는 배격해야 할 1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모든 차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질성=악, 이질성(차이)=선이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 동질성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고 차이에는 진보성과 후진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굳이 통일을 고민하고 통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의 세월동안 고초를 치를 필요가 없다.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계통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몇 가지 언어의 약속만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비용을 거의 치르지 않아도 되므로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동질성인가. 거꾸로 차이를 공존시키자고 할 때, 남한의 자본주의 탈주체적인 문화, 성상품화의 문화, 폭력 문화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꿈꾸면서 한편으로는 스미스(Smith, 1996)가 말하는 종족적 동질성에 기원을 둔 민족공동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목적의식적 정책과 자연발생적 힘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서 통일은 논리적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족'이라는 응집성이 가진 자연발생적 힘을 초기에는 이용할

40) 그 선두에 섰던 그룹이 '또하나의 문화' 팀이다. 그들이 생산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1, 2는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조한혜정·이우영 등의 『탈분단시대를 열며』(삼인, 2000)는 '남과 북:문화 통합' 프로젝트팀의 4년간의 연구성과이다. 급작스런 정치, 경제적 통일이 초래할지도 모를 사회, 문화적 갈등을 연구하고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통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피력하고 있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힘을 쫓는 통일은 흡수통일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므로 목적의식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기능주의적 교류는 자칫하면 힘, 즉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로 변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보면 다른 부부도 비슷한 생활습관, 사고방식, 비슷한 생활문화 속에서 닮아가기 마련이다. 닮아갈 때 일반적으로 가부장제 문화 밑에서 여성의 남성을 쫓도록 구조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 공동체, 우리가 새롭게 공유해야 할 동질성은 낙후된 가치와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목적의식적 노력으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와 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류와 통합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도 필요하다. 교류와 접촉 그 자체가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차재호, 1993). 전자가 후자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분단관리체제하에서도 교류와 접촉이 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과 같이 분단과 전쟁으로 50여년 동안 냉전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교류와 접촉 자체가 금기시되어온 사회에서는 전자는 후자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 잊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깊이는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코드를 이해의 코드로 바꿀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시민사회에게 남북 상호 교류와 접촉의 기회와 다양한 방식을 최대한 허용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에게 호혜적인 통일방식이 되어야 한다. 자연발생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의 증진은 힘있는 집단이나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고, 통일의 길에서도 소외된 집단이나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분단으로 소외 받고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 받도록 우선 배려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 합의체나 연방기구가 성립함에 따라 군비감축이 발생할 텐데, 감축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소외 받고 희생 받은 사람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돌려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문화공동체에는 남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수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문화도 수용되어야 한다. 이미 남한 사회에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성별간 다양한 문화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모든 문화가 바람직하다거나 수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체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나온 문화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를 공존이라는 이유로 방임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층의 폭력 문화는 계몽과 자율의 원리 속에서 개성 있는 세대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 또한 지난 시기 새마을 운동이 했듯이 지역간의 상이한 주거문

화를 서구식 주거 형태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익환의 '1국가 다체제 통일방안'이나 다체제 국가의 구성원리나 생활세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와 함께 남남 대화도 절실하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에는 자주, 민주,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이 대립되어 왔고 보수와 진보간에는 역사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깊은 골이 패어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강력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노-사-정 3자 연대의 틀을 만들어 왔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시장 중심적 사고가 이들 복지국가에도 파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노동 우위의 3자 연대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김성희, 1996). 이러한 3자 연대가 가능한 조건은 연대와 타협, 양보이다. 우리가 만들려는 남북 통일의 사회문화공동체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성장과 연대와 타협이 절실하다. 남북의 대화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남 대화에서도 상호주의 정신보다는 사회적 강자가 먼저 양보하여 전체의 협평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비상호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는 연대를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균형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사회문화공동체의 수립은 통일 사회에 대한 지향이며 목표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과정이고 운동이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해가는 운동이다.

## 5. 맷음말: 남북 사람이 같이 사는 길

이상과 같이 남북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의제에서 왜 흡수통일은 그 대답이 아닌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부터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흡수통일을 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으로 가정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 및 동화시켜온 남한의 짧은 경험에서 성공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체제를 이탈하여 온 사람들이 아닌 북한 주민을 남한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그렇다면 남북이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고 차이 자체를 이해하며 배우고 공존할 수 있으면서도 통일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우리는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접합, 다시 말해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및 보완가능성에서

찾았다.

남북 사람이 생활세계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상태이자 지향을 통일된 '사회문화 공동체'라고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상을 설정해두기 보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50여 년의 분단은 '지리적 분단' 뿐만 아니라 '머리의 분단'을 가져왔고 '몸의 분단' 조차 가져왔다. 2000년 9월 2일, 수십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비전향장기수 사건이나 2000년 8월 15일 이후 세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사건이 웅변하듯이 분단은 '귀향권'과 같은 자유로운 몸의 권리를 금기시 해왔다. 분단이 만든 사슬인 시뻘건 줄이 그어진 '연좌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여, 카인의 낙인처럼 사람에게 운신의 폭을 좁혔고 기본권을 통제했다. 바로 분단이 질곡시킨 인권을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수립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평화로운 삶이 무사안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핵의 위협이 놓인 한반도의 운명 앞에서 평화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 군사적 주권을 상실하여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미군의 노리개감이 되는 현실,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은 바로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통일된 사회문화공동체의 논의는 먼 가치의 이정표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상실한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려는 데서부터 시작하며 그것은 주권의 회복, 분단의 극복과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양산된 문제 또한 북한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볼 수 없다. 한반도가 구조적으로 처해있는 문제들의 복합 작용일 수밖에 없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4위의 해외이산가족을 갖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지어져 있다. 세계의 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에 의해 새로운 사회문화의 형성을 꿈꾸고 있는데,<sup>41)</sup> 우리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질곡에 갇혀 오로지 정치적 해결에 의해 이산가족의 장래가 달려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운명이 달려 있을 뿐이다.

한반도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평화를 꿈꾸는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통일의 문제가 놓여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문화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제도의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통일과 생활세계의 통일을 분리시킬 수

41)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귀옥(1999가)의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출판부)를 참조 바람.

없는 것이다. 물론 제도의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활세계의 통일은 인내와 관용을 요구한다. 또한 완전한 동질성을 사고한다는 것은 이상적이거나 급진적이다. 한편 동질성[동질적 민족정체성]을 가졌기에 ‘새로운’ 동질성을 꿈꾼다. 그러므로 동질성은 통일의 기초이고, 차이는 통일의 조건이며, 동질성과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것은 통일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구(1993),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원, 《민족동질화 촉진의 모색》, 통일원.
- \_\_\_\_\_(2000),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 강현두(1992), “남북한 언론 교류와 협력의 방안 모색”,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3: 129-147.
- 고병현(2000),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엮음, 《여성과 평화》, 당대출판사.
- 고영환(1989),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 국가안전기획부(1995), 《북한의「민족주의」선전자료집》, 국가안전기획부.
- 권혁범(1999), “내 몸속의 반공회로”, 또하나의문화 통일소모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하나의문화.
- \_\_\_\_\_(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 \_\_\_\_\_(2000가) “통일교육에서 탈분단 시민교육으로 — 평화, 인권, 그리고 차이의 공존”,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토론회 발표문, 11월 2일.
- 김귀옥·정영철(1996), “북한'인민'의 생활세계 연구 — 1980, 90년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 《96북한및통일연구논문집(IV)》, 통일원.
- 김귀옥(1998), “소수 집단 연구 — 동향과 쟁점 —”, 미발표원고.
- \_\_\_\_\_(1999), “남북 생활문화부문 교류프로그램”, 《문화예술 주요부문별 남북교류프로그램 연구》(공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_\_\_\_\_(1999가),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2000), “남북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 방안 모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 시청행위와 반응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00 KBS 통일방송 국제 심포지엄 발표문.
- \_\_\_\_\_(2000가), “‘북조선’ 문화의 특징과 ‘인민’의 의식 이해하기”, 경실협 통일협회 발표문 10월.
- \_\_\_\_\_(2000나),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엮음, 《여성과 평화1》, 당대출판사.
- 김낙중·노중선(1989), 《현단계 제통일방안》, 한백사.
- 김동배(1996),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 김동배 · 이기영(1997), “민간기관의 탈북자 지원 현황과 과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김명세(1996),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 \_\_\_\_\_ (1999), “‘우열’과 ‘다름’의 남북 문화”,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장과 남한 학자들의 논평 —》, 오름.
- 김민곤(2000), “청소년(학생)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토론회 발표문.
- 김성희(1996), “스웨덴 모델 — 노동의 대안적 체제의 실험”, 《경제와 사회》 31호(가을호).
- 김일성(1976),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 \_\_\_\_\_ (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김정일 저작선집》.
- \_\_\_\_\_ (1992),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또하나의 문화 통일소모임(1996),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하나의 문화.
- \_\_\_\_\_ (1999),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하나의 문화.
- 리영희(1997), “민족 통일의 세계사적 인식”, 강만길 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심지.
- \_\_\_\_\_ (1999), 《반세기의 신화》, 삼인.
- 문익환전집출간위원회(1999), 《문익환 전집. 통일 1》, 사계절출판사.
- 박수영(1985),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승덕(1989[1985]),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 주체사상총서 8》(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국.
- 박종철 · 김영윤 · 이우영(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백완기 · 신유근 외(1996), 《문화와 국가경쟁력》, 박영사.
- 송두율(2000),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례신문사.
- 신용하 엮음(1987),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1994),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재단.
- 양영식(1997), 《통일정책론》, 박영사.
- 연합뉴스사. 《연합뉴스》.
-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과학교육사.
- 원용진(1996), “대중문화의 ‘과잉담론’”, 《경제와 사회》 29호(봄호).

- 윤덕룡·강태규(1996),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심포지움.
- 윤덕희·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윤덕희(1994), “통일문화의 개념정립과 형성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민족통일연구원 12월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여령(1998),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0권 2호.
- 윤인진(1996), “재미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회 엮음, 《재외한인연구》 6: 66-95.
- \_\_\_\_\_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가을호.
- 이금순(1996), “탈북귀순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반도 통일정책과 탈북·귀순자 문제》, 호서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
- 이금순·송정호(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제1호.
- 이민수(1997), “통일한국의 가치지향과 사회윤리”,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 이상기(2000), “통일 이전 문화통합을 위한 노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5회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 이상만(1998), “북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통일후 북한주민들의 체제적응 방향”,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편, 《민족발전연구》 제2호: 7-14.
- 이상복(2000), “동·서독 문화교류 — 그 과정과 사례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제4회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이승희(1998), “북한여성문화의 형성과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원구원 주최 《북한문화에 나타난 여성상》 제16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 이온죽 외(1997),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꿈.
- 이용필(1995[1992]), 《남북한기능통합론》. 신유.
- 이우영(1994),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2000), “남북한문화정책의 특성과 남북문화의 만남”, 한국산업사회학회 제3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9월.
- 이장호(1997), “남북한 주민의 의식 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 \_\_\_\_\_ (1997),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이장희(1997),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현실적 이행 방안”, 경실련 통일협회 엮음, 《민족

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심지.

\_\_\_\_\_ (2000), “남북정상회담후 시민단체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경실련 통일협회 공동 심포지엄 발표문.

이재혁(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2집(여름호).

이정우·김형수(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훈(1996),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

이철우(1996),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원 1996년 연구용역과제》, 통일원.

이춘길(1997), “통일한국의 문화예술정책”,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이현경(1994),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민족통일 연구원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월.

임혁백(1995),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 이용필 외, 《남북한기능통합론》, 신유.

장춘익 외(1996),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 녹진.

전우택·민성길(1996),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조민(1996),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조한혜정·이우영(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삼인.

좋은벗들(2000),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 북한난민 1,027명·남한주민 500명 설문조사 결과 —”, 좋은벗들 심포지움.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출판사.

차재호(1993),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78-100.

통일교육원(1999), 《북한문제 이해 — 실태와 변화 가능성 —》, 통일교육원.

통일원(1994),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북한인권자료-I》, 서울: 통일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999), 《여성의 통일의식과 태도조사 및 통일의식 합양방안 연구 —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연구용역).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엮음(2000),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홍사단출판부.

KBS 통일방송연구(1999), 《국민통일의식조사》, 한국방송공사.

MBC 통일방송연구(1997),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문화방송.

Anderson, B.(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윤형숙 옮김. 1991.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Bonacich, E.(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and

- Modell. 1980.
- Geertz, Clifford(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Maffesoli, M.(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 인식론적 요소들”, 박재환 역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Reese-Schäfer, Walter(1998[1991]), *Jürgen Habermas*, 선우 현 옮김, 《하버마스 — 철학과 사회이론 —》, 거름.
- Smith, Anthony D(1996[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London: Blackwell.
- Swidler, Ann(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1(April): 273-286.
- Triandis, H.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Warnier, Jean-Pierre(2000[1999]),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주형일 옮김, 《문화의 세계화》, 한울.
- Williams, R.(1983), *Key Words*, London: Fontana.
- Zinn, Howard(1990),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Y.: Harper Perennial Publisher.

abstract

## A Study on Building a Socio-cultural Community of North-South Korea and Finding Ways to Korean Reunification

Gwi Ok Kim\*

During the present Division Period of 55 years, a number of ways to Korean Reunification have been put out by several politicians, scholars, or activists. It seems that they have the various contents according to a standpoint and goal of their own, but one common fact focusing on a political level.

While I checked them, I found that they did not consider a socio-cultural level fully due to that fact. 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made me ponder this level necessarily. Though Germany carried out the Reunification politically, it cannot unify one state and one everyday world socio-culturally till now. It took many other countries experienced unifying long time until it established a unified state really. A country is sometimes under experiencing division in a everyday world.

As for us, our government is willing to have persons evading North Korea internalize politics, society, culture, et al. of South forcefully. It seems to believe that when they come to internalize them successfully, it can absorb North into a unifying state. I estimate that its plan would not carry out well, and the persons would experience more difficulties if so.

\*Visiting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 Kyungnam University and Post-Doc.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search Area: Historical Sociology, Social Studies on North Korea, National Sociology, Feminist Studies. Major Publication: *The Identity and Life Experiences of Wollamin*(1999), *How Are the Women Living in North Korea?*(2000), “Another Piece of Lost Korean History: A Study on the Military Government of Kangwon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2000), “Splitting Anti-community from the Bottom up: Through Oral History of *Wollamin*”(1999), “The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Trends and Issues”(1998).  
E-mail: freeox8@orgio.net

The reunification should connect a political level with a socio-cultural level certainly. By reason of our experience and others, we need to consider the vision of a socio-cultural level if we obtain the successful reunification of Korea. I called it as “building a socio-cultural community of North-South Korea”. In this paper, I tried to propose many ways to build it.